

해양쓰레기에 뒤덮힌 연안... 수거·재활용대책 시급

매년 해양쓰레기 18만톤 달해 수거 7~8만톤 불과... 피해 초래 플라스틱쓰레기 해양유입 막고 예방·수거 넘어 재활용 확대해야



지난 5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서부두에서 해군 2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이 해경, 해양수산청, 해양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해양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합동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국내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18만톤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년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는 전체 18만톤 중에서 약 7~8만톤 가량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수거되지 못하고 남은 약 10만여 톤의 해양쓰레기는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유령어업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까지 145.9톤/인당으로 증가할 것

로 추정돼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바다로 유입되는 양 역시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어패류를 인간들이 섭취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진이 지난 달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보고

서에 따르면 연간 해양으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약 480만톤에서 12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이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과 2016년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환

경제회(UNEP)은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쓰레기를 예방 및 획기적 저감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초 워킹그룹을 설치했다.

외국은 재활용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KMI의 설명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업용 쓰레기를 수집, 분류, 재활용하는 'EU fi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해 유럽 9개국에서 폐기물 수집·분류시설과 재활용 공장을 연계해 폐어망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해양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폐어망에서 금속을 제거한 후 남은 폐합성수지를 소각 처리해 회수한 열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일본은 페스티로폼 부표를 펠릿으로 가공해 해조류 자숙용 보일러 혹은 족욕탕용 보일러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료로 한 운동화, 선글라스, 스케이트

보드 등 업사이클링 제품과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추출한 원사로 제작한 수영복, 운동복 등이 상품화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예방·수거 중심에서 재활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학계,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해양쓰레기 재활용 기술협의회'를 설립해 재활용 기술 및 정책개발,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정 KMI 전문연구원은 "공공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전문가 설립 및 어촌형 순환경제 모델 개발을 하여야 하며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체가 재활용이 용이한 디자인과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해수부가 입법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어구관리법'은 이러한 해양쓰레기 재활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될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정부인증 시험·검사 신뢰도 높인다

정부,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기간 준수·정보제공 확대 등 나서

정부는 3일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구성됐다.

우선 시험·검사 준수와 관련해 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해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해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

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별로 인력 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채용 및 운용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여건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용산 붕괴현장 수색하는 구조대원

3일 낮 12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견과 함께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극복 돕는다

산업부, 현장컨설팅 사업 시행

정부가 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에 대상

으로 실시한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고 88%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에 국표원은 올해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과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특허청, '프로젝트 R&D' 공동 추진

특허·R&D·사업화 등 일괄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도입된 '프로젝트 R&D(Project-R&D)' 과제를 양 부처가 공동 지원한다.

프로젝트 R&D 과제는 공동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 특허,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묶음으로 제공해 기업간 자발적·수평적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업 5개사 이상, 지원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양 부처의 공동지원 방침에 따라 이번 과제는 한번의 신청 및 평가로 특허분석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국농촌건축대전' 29일까지 공모

농식품부-농어촌공-농촌건축학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와 공동으로 '2018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한국농촌건축대전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을 주제로 결정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은 농촌지역 65세이상 고령자, 청년귀농인 등에게 문화,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의 심사절차



를 통해 총 7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200만 원, 장려상(4점,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각 1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작에게도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raise.go.kr/ruralarchi)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동부, 건설현장 등 온열질환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노동자의 열사병 재해가 많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장시간 폭염에 노출돼 걸리는 병이다. 어지럼증, 발열, 구토 등의 초기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

해는 모두 16건(사망자 2명)이며 절반인 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돼야 하고 작업장 근처에 차양 등으로 만든 그늘이 있어야 하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휴식해야 한다.

/세종=최신용 기자